

과학기술 협력으로부터 남북통일을 준비하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박 성 현

I. 서론

1945년 해방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 남북 협상 등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1948년 남북에 각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분단되어 어언 66년이 흘렀다. 그 동안 6·25 사변, 천안함 사건, 2만 6천 명이 넘는 탈북자 입국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갈등과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지내왔다.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념 갈등과 엄청난 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며,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은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모두 혜택을 주는 동북아시아의 대변환으로, 당사국인 한국은 좀 더 치밀한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이 모두 나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국정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과학기술이다. 북한에서도 2013년 11월 13일에 과학자·기술자대회(2010년 3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림)를 열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과학기술에 강성국가 건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 줄 수 있는 분야는 정치색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구상돼 왔지만, 이제는 남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식 위원만 50명, 전문위원과 자문단 등을 포함하면 총 149명에 이르는 대규모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4개 분과위로 구성됐고, 이외에도 3개 자문단(시민, 통일교육, 언론)과 국회협의체가 설치되었다. 아쉽게도 통일준비위원 149명 가운데 과학기술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서독 통합과정에서는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전

면에 내세웠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늦게나마 통일준비위원회에 과학기술분과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I. 독일 통합이 주는 교훈

1. 동·서독 통합 과정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후의 독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0년에 급격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과학기술분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독일은 1987년에 양독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합의하여 60여 개의 공동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공동연구 사업을 통하여 상호간 정보가 교류되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 후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 이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이 발생하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민중의 힘에 의하여 무너지자, 한 달이 조금 지난 1989년 12월 양독 정상은 드레스덴에서 만나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통일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90년 3월에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90%에 이르는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합병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확인한 다음 통일은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빠르게 진행되어 1990년 10월에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2. 과학기술분야 통합에 관한 12가지 기본방침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양독 간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은 특이하게도 통일조약 38조에 1991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방학술평의회(Wissenschaftsrat)는 1990년 7월에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에 관한 12가지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4)이 발간한 책자 ‘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통일연구원(2006)이 발간한 ‘독일 통일백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1) 1987년에 체결한 양독 간 과학기술협력조약을 바탕으로 양독 간의 교류를 급속히 확대한다. 그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동독정부가 지배했던 중앙관리를 자유화시킨다. 중장기적 목

표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이는 동독의 체제를 서독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물론 이 기회에 서독의 시스템도 점검한다.

- (2)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되, 자율권은 연구소가 갖는다. 이 원칙하에 양독의 대학과 연구소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성을 지닌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과거 동독의 학제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해당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 독일 차원에서 다룬다.
- (3)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는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며, 보유 서적의 내용은 마르크주의에 편향되어 있으며, 장비 특히 컴퓨터가 크게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4) 동독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3만 2000명인데, 이는 동독 입학 해당인구의 12~13%로 서독의 23%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를 서독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독의 대학에 여유가 없으므로 동독 출신 학생들이 서독지역으로 오지 않고 동독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독의 수준이 낮으므로 동독 소재 대학의 교수와 학생에게 1년간 서독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동독의 인문·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사상에 의존하고 있어, 이 분야는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5년간 매년 10개의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단기적으로는 서독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어 상호 강의와 세미나를 교환한다.
- (6) 동독인이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재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동독지역 하겐(Hagen)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대학을 활용한다.
- (7) 대학교수 채용에 경쟁과 업적을 중시한다. 이는 특히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젊은 교수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장학금, 채용, 연구비 등의 선정에서 무조건 업적과 능력에 따른다.
 - 요구 수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나 업무 또는 채용은 국제적 이동성을 지녀야 한다.
 - 기관 내부 또는 독일 내부에만 채용공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 (8) 동독지역 내 연구여건을 시급히 개선하고, 특히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막스프랑크연구소를 동독지역에 설치하여 1991년에는 60개의 후속세대 프로그램을 그리고 1992년에서 1995년까지는 매년 20개의 젊은 과학자 연구집단을 지원한다.
- (9) 양독 간 지식교환을 위하여
 - 세미나, 학회, 여름학교를 동독지역에서 개최한다.
 - 전공과 방학교실과 같은 활동을 확대한다.
 - 2~3개월 간 열리는 여름 대학을 동독지역에서 개최한다.
 - 동독 학자를 서독 대학의 자문위원, 대학위원 등으로 초대한다.
 - 서독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동독지역에서 개최한다.
- (10) 동독 출신 학자에게 과학기술부(BMFT)나 독일연구재단(DFG)의 문호를 개방한다. 이는 동독지역의 대학과 연구소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11) 동독은 정치적 결정으로 연구는 대학이 아닌 과학아카데미(die Akademie der Wissenschaften)가 관장하였다. 이들 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는 국제적 저명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재정비되어야 한다.

(12)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는 그들이 관계하는 동유럽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유럽과의 국제협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학술교류처(DAAD)와 홀볼트재단은 예산을 25% 인상하여 동독 출신 학자가 외국기관에 방문하여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를 동독지역에 초빙하도록 한다.

독일은 위와 같은 12가지 기본방침에 따라서 통일 후 과학기술분야 통합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독일은 통일 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합에 따른 많은 사회, 경제, 문화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과학기술분야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통일독일은 이에 기반하여 어려운 유럽경제 상황속에서도 경제성장을 견실하게 이어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III. 남북 관계와 과학기술 분야의 준비

1. 남북관계의 변화

우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당국자 간의 공식 접촉은 1972년의 7·4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1988년의 7·7 특별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할 것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그 후 2000년 남북한 정상 간에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에는 10·4 공동선언이 있었다. 10·4 공동선언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열린 남북총리회담(2007년 11월 14~16일)에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역사유적 발굴 및 보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힘입어 과학기술계에서도 다양한 남북 간 교류가 시도되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한민족공동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가 북한에서 그리고 연변 등 중국의 인접 도시에서 남북한 학자들의 학술모임을 개최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어정보학회가 주최한 국제공동세미나는 중국 연길에서 10여 차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 행사로 끝났을 뿐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질 못했다. 그러다 북한

의 금강산 관광객 총살사건(2008년 7월 12일),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 26일)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10년 5·24 조치를 내려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5·24 조치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계의 준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협력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학회별로, 정부의 기관별로, 혹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준비된 연구는 2014년에 발간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연구보고서 ‘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량안보, 보건 의료, 가축질병, 자연생태계 보전, 산림녹화, 광물자원 탐사, 에너지 수급, 사회기반 시스템, 이공계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체제, 국가통계, 과학기술용어 표준화 등에 걸쳐 12개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현황분석과 통일에 대비한 통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를 통일 준비를 위하여 바람직한 연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남북한 통일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1) 곡물 수급과 식량안보 정책

첫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분야인 농업, 임업, 의료보건, 가축질병 등에서부터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정치논리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 조직에서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한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주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장소는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이나 국가과학원이, 남한에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식량을 위한 곡물수급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4)에 의하면 2012년 곡물(식량과 사료 등) 자급률은 남한이 26%, 북한이 63%이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곡물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으나,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곡물수입이 안되어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 북한의 식량 절대 부족량은 대략 200만 톤(통계청, 2013)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식량생산이 부진한 원인은 첫째, 주체농법에 의한 중앙집권적 획일 지도체제로 우

량종묘와 기술개발에 의한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비료 등 생산자재의 부족과 농기계 부품 및 유류 등의 조달공급이 원만하지 못하여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셋째, 경지의 확대를 위한 지나친 산지개간으로 생산기반의 노후화와 파괴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여 생산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넷째, 토양침식이 높은 옥수수 단일작물의 연작으로 토양비옥도가 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성화로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기상재해에 민감한 농지관리체제로 인하여 가뭄, 태풍, 홍수 등의 피해가 겹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4)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비축제도 법제화, 식용 콩의 자급을 위한 계획 수립, 축산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비상시 식량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DMZ 세계평화공원의 설립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안에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는 2007년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나 그 동안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를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설치하면 남북한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상호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자연스럽게 진전될 것이다. 전쟁의 상징인 DMZ가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요람이 된다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 개발

남북한 간에 과학기술의 협력 물꼬를 트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IT 분야의 협력 관계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한국이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소프트웨어 중심 IT 인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인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IT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만나면 세계적인 IT 파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IT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하면 북한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32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의 사무국이 한림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림원은 아세아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의 국가과학원도 이 연합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림원들이 중심이 되어 아세아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

진시켜 나간다면 북한도 동참하기를 희망하리라고 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북한의 국가 과학원이 협력관계를 모색한다면,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협력과 교류의 장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에너지 수급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은 에너지 부문의 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난방, 취사, 조명 등의 민생용 에너지에서부터 산업, 수송, 공공 기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 수요부문에 걸쳐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실정이다. 북한의 주 에너지원은 석탄과 수력인데,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 정치여건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용은 불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4)에 의하면, 북한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1990년의 23.9백만 TOE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이고, 그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엔 12.2백만 TOE로 1990년 대비 51.2% 규모이다. 1990년에 북한은 남한의 1/4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남한의 1/23 수준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현재 722만 kW의 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59%인 426만 kW는 수력설비이고, 41%인 296만 kW는 화력설비이다. 그러나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은 35% 수준으로 설비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부문 최대 과제는 남북통합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인프라 통합, 기술 및 품질표준의 통합, 에너지 정책과 수급의 통합이다. 에너지 인프라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통합 시에 북한 전역에 대한 가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전력시스템은 모든 설비가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설비 보충과 현대화 조치가 요구된다. 에너지는 정해진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 수송, 소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에너지 공급난이 만성화되면서 기존의 기술 및 품질표준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에너지 기술과 품질표준의 통합은 북한 에너지 부문의 전반적인 향상과 연계하여 행해져야 할 과제이다. 에너지 정책과 수급의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에너지 기술과 품질표준의 일원화, 상업 에너지시스템의 도입, 북한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남북 에너지시스템 통합 마스터플랜 작성 등이다.

5) 국가 통계의 작성

정확한 북한의 국가통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남북경협이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1인당 GDP, 전력 사정 등에 대한

여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통일되기 이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한 북한통계를 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에 남북한 국가통계의 통합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현재로는 통계 작성기준이나 표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순조로운 통합은 어려울 전망이다. 동·서독의 통합을 살펴보자. 1990년에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통일 독일 정부는 동독 통계의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그 신뢰도가 너무 낮고 시계열 일관성이 떨어져 결국 서독 통계자료와의 통합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동독 통계작성을 새로이 실시한 사례가 있다. 북한의 통계자료도 그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독일의 경험을 살려 북한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제언하고 싶다.

남북한 국가통계 작성의 주요 차이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한은 분산형 통계제도(많은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청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음)이고,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중앙통계국이 최종적으로 국가통계 작성 및 발표)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남한과 달리 유엔 국민소득표준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량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서비스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중앙계획경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물가 통제와 정확한 생산량의 지시'로 이중적인 물가를 가지고 있어 통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통계자료가 취합되는 단계에서 각 부서와 지방정부 책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통계 신뢰도를 높여 주기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끝맺으며

2010년 시행된 5·24 조치 이후에 얼어붙어 있는 남북한 경색국면을 타개하여 통일 준비를 앞당기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색채가 적은 과학기술 분야부터 물꼬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에 대한 남한의 과학기술 분야의 도움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게 식량증산 농업기술을 전수하거나, 가축질병의 방역관리를 도와주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와주거나, 훼손된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여 주거나, 국가통계 작성기준이나 표준을 도와주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과감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통일준비위원회는 고찰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와 관련된 저자의 신문 기고글로는 박성현(2014, 조선일보)와 박성현(2014, 전자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

는 한반도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조만간 통일되기를 기원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1. 박성현, “남북 관계, 과학기술 협력으로 물꼬 트자”, 조선일보 특별기고, 2014. 1. 4.
2. 박성현, “통일준비에서 도외시된 과학기술”, 전자신문 오피니언, 2014. 8. 8.
3. 통계청, 201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54쪽, 2013, 대전.
4. 통일연구원, 독일 통일백서, 2006, 서울.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 방안, 384쪽, 2014, 성남.